

정체불명 한글 포장 '짜통 과일' 판친다

'시금치배', '교수형감' 등 신남방국가 유통 윤재갑 "대한민국 농산물 이미지 무너뜨려"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국가 일부에서 정체불명의 한글로 포장된 중국산 짜통 과일이 마차 한국산 인양 판매되고 있음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뒷집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7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과 태국 등에

서 중국산 저가 과일에 '한국배', '황금배', '시금치배', '교수형감' 등 정체불명의 한글로 포장된 짜통 과일이 판매되고 있다. 언 듯 보면 그럴싸한 한글 표기로 인해, 뒷면에 깨알같이 적힌 '생산지(production place)=CHINA'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알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 짜통 과일이 등장한 이유는 베



트남과 태국 등 이른바 신남방국가에서 대한민국 농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남방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5.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값보다 28.2% 증가한 9.3억 불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전체 농식품 수출액 가운데 이들 신남방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20.5%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과 태국 등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의 신흥 대상국

로 부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aT는 현지 국가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단 이유로, 지난 7개월 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집'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짜통 과일이 팔릴수록 우리 농민과 aT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농산물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신남방국가로의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외교부와 농식품부를 통해 현지 정부와 짜통 과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aT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대선 때까지 고위 당정청 안 열린다

여권의 '국정 컨트롤타워'인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칫 휘말릴 수 있는 선거 중립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선 이후로는 차기 정권의 인수위로 무게중심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회의체 활동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자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대체공휴일)을 끝으로 대선 때까지 열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주로 총리공관에서 진행했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고 중점 법안도 정기국회 초반 대부분 정리된 만큼 국정현안 대응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인사는 "이번 결정에 있어 당과 청와대가 이심전심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대선 정국에서 선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밝은 표정으로 대화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환담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이재명 청문회' 여야 공수 대격돌

행안·국토, 경기도 국감 '하이라이트'... 18일 대검 국감도 주목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감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모두 이재명 후보의 '홍그라운드'인 경기도청에서 진행된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피감기관 수장으로 참석하는 셈이다.

여야 모두 각당 '대장동 TF'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 투입해 화력을 보강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

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의 말버구기나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 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당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논리를 내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국감의 또다른 격전지는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파고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대검의 사적 정보수집 의혹도 파고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 대부분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22일 여성가족위, 26-27일 운영위 국감이 진행된다. 정보위는 다음달 2일까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국감 실현"

국감 인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021년 국정감사 키워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였다. 특히 광주시 '개인정보보호' 신실 등 6건의 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국감을 실현했다.

금융위 국감에서 민 의원은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제규명에 노력했다.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이들이 전·현직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금융원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통적 수법인 대출방지형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 정부기관 사칭형이 크게 증가했으며, 계좌대출 억제 부작용,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매



도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의 필요성,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끼기 영업 등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등 서민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형 중 5·18민주유공자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5·18 민주유공자 4천295명 중 9.87%인 42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민 의원이 발의한 5·18예우법이 통과돼 생활이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5·18 민주유공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보훈처 추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 자치단체 7곳에서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각각인 점을 분석하고,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훈처가 격차 해소 및 전원 지급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호남 무등록 점포 35% 재난지원금 못 받아

송갑석 "전통시장 노점 양성화 대책 필요"

호남권 전통시장 점포 3곳 중 1곳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이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호남권 전통시장 점포 2만617곳 중 무등록점포는 35%인 7천12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충청권의 무등록점포는 2만802곳 중 21%인 4천443곳이었고, 영남권은 8만6천289곳 중 18%인 1만5천329곳, 수도권은 7만6천761곳 중 7%인 5천379곳이었다.

호남에선 전남이 1만1천65곳 중 44%인



4천886곳이 무등록점포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 24%, 광주 23%였다.

무등록점포는 자연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노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 금융 지원, 노점 운영권 인정 등 무등록점포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송영길 "尹징계적법, 보도 왜 적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언론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2개월 징계" 적법 판결을 거론하며 "한겨레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통기사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 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시점에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며 "조선과 중앙은 '갑보다 강한' 편을 휘둘렀다"고 일부 언론을 직격했다. /연합뉴스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